

**2005.1.21(金)**

# **檢 討 報 告 書**

**(第 136回 臨時會)**

**達 城 郡 議 會**  
**專 門 委 員 文 乙 姬**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출일자 : 2005. 1.

2. 제 출 자 : 달성군수

3.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

### 1) 제안사유
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와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명확히 하고, 7~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자동차세를 경감하며, “국가유공자·5·18민주화 유공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” 등 반복되는 어휘 등 관련 조문을 정비

### 2) 근거

- 지방세법 제9조(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)

### 3) 주요내용
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(안 제2조, 제3조)

- “국가유공자·5·18민주화유공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”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“국가유공자 등”으로 간결하게 정비(안 제2조)
-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며, 그 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까지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(안 제13조의1)
- 종합토지세의 감면방식을 명확하게 규정(안 제28조)

#### 4. 검토보고

- 본 조례 개정은 자동차세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불만 해소를 위한 경감 및 반복되는 어휘 등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행자부 및 대구광역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임
- 본 개정조례안 제2조(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) 및 제3조(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)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, 또한 반복되는 어휘를 “국가유공자 등”으로 간결하게 정비코자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임
- 본 개정조례안 제13조의 1(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) 신설
  - 제91회 임시회(2000.6.1) 의결에 의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,

자동차세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,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해소를 위하여 인상시기를 3년 연장하게 됨으로서 조문을 신설하는 것임.

· 현행 인상시기 : 2005년부터

· 개정 " : 2008년부터

※ 현행세율 : 년 65,000원

- 제1호

·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차종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적용 부과 : 년 65,000원(현행과 같음)

※ 그레이스, 이스타냐, 봉고, 프레지오 등

- 제2호

“제1호” 이외 자동차에 대한 부과 ⇒ 2004년까지 년 65,000원 부과

· 현행조례 :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년 33%씩 인상함

※ 2005년 : 33%, 2006년 : 66%, 2007년 : 100%

· 개정(안) : 현행 단계적 인상분의 50% 경감

**예시) 2005년도(7인승이상 10인승이하) 자동차세 산출**

○ 일반승용차 : 2500cc 경우

$2500\text{cc} \times 220\text{원} = 550,000\text{원}$  (년간 자동차세)

○ 소렌토(7인승) : 2500cc

2004년까지 : 년간 65,000원

(10만원 이하는 년 1회만 불입)

현행 : 2005년도 33% 적용 세율

$2500\text{cc} \times 220\text{원} - 65,000\text{원} = 485,000\text{원}$

$485,000\text{원} \times 33\% = 160,050\text{원}$

$160,050\text{원} + 65,000\text{원} = 225,050\text{원}$

개정 :  $225,050\text{원} \times 50\% = 112,525\text{원}$

- 본 개정조례안 제28조(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) 신설
  - 현행 조례상 종합토지세 감면시 감면기준이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아 그 감면기준을 “과세표준액...”으로 명확하게 표시한 것임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출일자 : 2005. 1.

2. 제 출 자 : 달성군수

3.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

### 1) 제안사유

-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·재난·민방위 등 다원화 되어있는 안전관련제도를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 기능별로 통합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이 제정되어
- 2004. 6. 1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임.

### 2) 근거
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(지역위원회)

### 3)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, 안전문화운동추진, 재난관리기관간의 업무협약·조정 등으로 함(안 제2조)
- 위원회의 구성은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의 장,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30인 이내로 구성 함(안 제3조)
- 위원의 임기(당연직은 제외)는 2년으로 하되,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음(안 제4조)
-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(안 제6조)
-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의 사전검토 및 기관간의 업무조정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(안 제7조)
- 필요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(안 제9조)
- 필요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음(안 제10조)

### 4. 검토보고

- 본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, 현재 다원화(재해·재난·민방위)되어있는 안전관련 제도를 통합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이 2004. 3. 11 법률 제7488호로 제정되었으며,

동 시행령이 2004. 5. 29 대통령령 제18407호로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,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###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(지역위원회)

제1항 “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,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 그밖에 이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소속하에 시·도 안전관리위원회를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하에 시·군·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”

제4항 “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본 조례안 제1조(목적)
- 본 조례안 제2조(위원회의기능)
  - 법 제12조(지역위원회의 기능)의 규정에 의함
- 본 조례안 제3조(위원회의 구성)

법 제11조 제2항 “시·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 시·군·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”

제3항 “시·도 위원회 및 시·군·구 위원회에 부의되는 의안을 검토하고, 관계 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” 규정에 의함

-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 ⇒ 위원장은 군수
- 조직개편,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 교체시 ⇒ 위원장에 통보
- 간사 1인 ⇒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



○ 본 조례안 제4조(위원의 임기)

- 위촉직 위원
  - 임기2년
  - 연임가능
  - 필요시 임기만료 전 해촉 가능

○ 본 조례안 제5조(위원장의 직무)

- 위원회 대표, 회무를 통할함.
- 위원장 사고시 ⇒ 부군수 직무대행

○ 본 조례안 제6조(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)

-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소집
- 회의소집시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  
⇒ 회의일시, 장소, 심의안건
-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
- 간사 ⇒ 회의출석 발언 가능

○ 본 조례안 제7조(위원회 실무위원회)

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

-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
- 실무위원회 위원장 ⇒ 부군수

위 원 ⇒ 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원 중

당해 기관·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

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회의소집

-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

○ 본 조례안 제8조(위원의 활용)

- 장기발전계획 수립시 위원의 전문지식 적극활용

- 본 조례안 제9조(조사·연구의 의뢰)
  - 필요시 관계전문가·관계기관·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
  - 연구·조사 위탁시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경비 지급가능
  
- 본 조례안 제10조(관계기관의 협조요청)
  - 필요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요청 가능
  - 위 사항 요청시 적극 협조
  
- 본 조례안 제11조(수당)
  -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 출석위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지급가능 단)공무원 제외
  - ※ 2005년도 당초예산 : 700천원
  
- 본 조례안 제12조(회의록의 비치)
  -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 ⇒ 위원장에 보고 후 보존
  
- 본 조례안 제13조 (회의결과의 통보)
  - 위원회위원장은 심의·의결사항을 위원, 관계기관·단체장에게 통보
  - 위원장은 의결된 사항의 이행실태 수시점검
  
- 본 조례안 제14조(위임규정)
  - 본조례 규정사항 이외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함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공포한날부터 시행
- 제2조(결과조치) 종전 재난관리법에 의한 운영은 이조례에 의한  
운영으로 간주함
- 제3조(폐지규정) 달성군지역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 폐지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출일자 : 2005. 1.

2. 제 출 자 : 달성군수

3.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

### 1) 제안사유

- 사회환경의 변화로 재난발생 양태가 복잡 다양화되고 있으나 재난관리부서의 인력부족 및 기술적 전문성 부족 등으로 효율적 대처가 어려움에 따라, 건축·토목 등의 전문분야 별로 대학교수·건축사·기술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「안전관리 민간기술자문단」을 구성·운영하여
-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75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.

### 2) 근거
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(안전관리자문단 구성·운영)

### 3) 주요내용

- 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, 재난시설의 안전 대책수립 등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함(안 제2조)
- 자문단의 구성은 안전관리 관련분야 전문가 및 교수,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10인 이상 20인 이내 군수가 위촉함(안 제3조)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함(안 제4조)
-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함(안 제6조)
- 자문단은 필요시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(안 제8조)
- 자문단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함(안 제10조)

### 4. 검토보고

- 본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75조 및 대구광역시 표준조례안에 의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것으로서, 이는 재난발생시 재난관리부서의 인력부족·기술적 전문성 부족 등으로 효율적 대처가 어려움에 따라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것임.

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(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·운영)  
제1항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 
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·  
운영할 수 있다”

제2항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·운영에  
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본 조례안 제1조(목적)
- 본 조례안 제2조(기능)
  - 자문단은 각종 안전점검 및 재난시설의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함.
- 본 조례안 제3조(구성)
  - 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10인이상 20인이내 구성
  - 위원은 군수가 위촉함 ⇒ 단장,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
    - 안전관리 관련분야 전문가 및 교수
    -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
    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전문가
- 본 조례안 제4조(임기)
  - 위임의 임기 ⇒ 2년, 연임 가능
  -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음
  - 궐위된 후임위원 임기 ⇒ 전임자의 잔여기간
- 본 조례안 제5조(단장과 부단장의 직무)
  - 단 장 ⇒ 자문단 대표, 직무총괄
  - 부단장 ⇒ 단장 보좌, 단장 궐위시 직무대행

- 본 조례안 제6조(자문단 회의)
  -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소집
    -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
    -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 통지
      - ⇒ 회의 일시, 장소, 안건 등
    - 회의시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의견진술 가능
- 본 조례안 제7조(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)
  - 군수가 자문 및 안전점검을 하고자 할 시
    - ⇒ 관계 서류·도면 등 제출
  - 긴급을 요할 시 ⇒ 구두 자문 또는 점검 요청 가능
- 본 조례안 제8조(의견청취)
  - 자문단은 필요시 현장조사, 관계공무원 의견청취, 관련자료 제출 요구
  -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응하여야 함.
- 본 조례안 제9조(안전점검 및 상담실시)
  - 자문단은 군수가 안전점검 등을 요청시 응하여야 함.
- 본 조례안 제10조(결과보고)
  - 자문단은 제2조(기능) 자문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결과보고
- 본 조례안 제11조(회의록 등)
  - 자문단은 회의록 작성·비치
    - 회의일시, 장소, 출석위원, 회의안건, 자문내용·결과 등을 기록
- 본 조례안 제12조(간사와 서기)
  - 간사 ⇒ 재난업무담당과장
  - 서기 ⇒ 재난업무담당

- 본 조례안 제13조(수당 등 지급)
  - 자문단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, 여비 지급가능
  - ※ 2005년도 당초예산 : 1,680천원
- 본 조례안 제14조(운영규정)
  - 본조례 규정사항 이외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이 별도 정함